

주 정부들 여유자금 두둑 ...35년 만 최대



▲ 세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 청사. 사진=shutterstock

올해 미국 주 정부들은 초과세수 등으로 여유자금이 35년 만에 최대 수준이어서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그 충격을 줄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 부채가 법에서 정한 한도 턱밑까지 차올라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까지 거론되는 연방정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6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전미예산관료협회(NASBO)를 인용해 올해 주정부의 '레이니 데이 펀드(rainy-day funds)'가 1,36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1년 전인 1,345억 달러에서 증가한 규모다.

레이니 데이 펀드는 불황에 대비해서 경기가 좋을 때 쌓아둔 초과세수 등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감원이 이뤄지면서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정부 입장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미국 주정부는 호황 때 세수를 낭비하지 않고 쌓아둠으로써 향후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미국 주정부의 레이니 데이 펀드 규모는 올해 주정부 지출의 12.4%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완만한(mild)' 경기침체가 올 경우 39개주는 이미 공간에 쌓아둔 초과세수 등을 통해 향후 세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지난 1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요즘 활기가 넘친다."며 "올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 국민 약 70% "바이든, 김정은에 회담 제안해야"

미국 국민 10명 중 7명이 북한과 긴장 완화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날 미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폴(The Harris Poll)'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 국민 68%가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 직접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58%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외교적 또는 경제적 인센티브, 즉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52%로 나타났다.

또 과반 이상의 미 국민은 '미 정부가 북한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제재보다는 북한 내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 국민의 54%는 '미국의 민간 자선단체의 인도 지원 활동가들이 미 정부의



▲ 미국 국민의 70%는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진=shutterstock

제한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63%는 '미 민간 자선단체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물자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조사보다 7%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월17일부터 19일까지 18세 이상 2천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 포인트이다.

“코로나 비상사태 끝나면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정책 폐기”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명분으로 시행됐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도 폐기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대법원에 이 같은 입장을 통지했다.

이른바 42호 정책(Title 42)으로 불리는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정책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것으로 2020년 3월 도입됐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으며,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했다. 이 정책에 근거해 육로를 통해 멕시코 등의 국

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민 250만 명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는 애초 이 정책을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 끝낸다는 입장이었으나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최종 판단 전까지는 정책을 유지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바이든 정부는 대법원에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42호 정책도 끝나며 이 상황에 대한 논의도 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5월 11일을 기해 3년여간 계속됐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날말퍼즐 정답

	1	혹	평				2	이	3	영
4	오	한		5	나	루	6	터		터
	리				막		7	울	8	타
9	온	10	고	지	신				박	
		드				11	골	목	상	12
13	으	름	14	장	짜					위
	악		15	갑	자	기		16	하	자
17	새	끼					18	고	객	

1459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5	3			2				9
	4				3			8
		2		8	9			
7					8			6
3			2					7
		1		7		5		
9			8			1	3	
		7			2		5	
	8		5		6			